

##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최 현\*

이 논문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시티즌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기준은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근거에 의해 한국인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심하지 않은 것이 최근에 일어난 정체성 변화의 결과인가 혹은 혈통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던 것인가는 차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인의 다문화주의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문화·국민에 대한 개방성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후진국의 문화·국민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인 한계를 보였다. 조사 결과는 또한 다문화주의의 대표적 사회 제도의 하나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시티즌십, 국민정체성, 적극적 조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 1. 머리말

이 논문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시티즌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라는 제목으로 한국 갤럽에 의뢰해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이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1987년에 165만에 미치지 못했던 외국인 입국자는 2006년 532만을 넘어 3배 이상 증가했다(법무부 2007a).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등 불법 체류 동포의 수도 1987년의 6,409명에서 1992년에는 73,868명, 1997년에는 266,30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8월 104,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주권자도 6,022명에서 15,567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법무부 2007b).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종적 단일성 내지 동질성을 전제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적 제도, 시티즌십 제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 원리와 제도, 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덕목(virtue)에 대해

---

1) 국민의식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의 과정은 1단계로 2006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19세 이상 인구를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2단계로 전국 16개 시도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로 최종조사지점에서 성×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구방문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지구화에 대비하고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냉전의 해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는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통일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sup>2)</sup>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것이 기우가 아님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실업 문제와 동서독 격차 해소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나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 잘 드러난다. 같은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는 동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조선족들은 남한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새터민들은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자본주의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 동포들을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남한의 시장에 내던져 놓고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기다리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혈연적 연결성을 근거로 통일 국가의 장래를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낙관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시티즌십 개념을 확장하고 또 소수자들을 우대하는 제도와 시민의식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국,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에 부합하는 시티즌십 제도

---

2)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인적교류, 시장통합, 연방제 통일, 흡수 통일 등 남북한 인구가동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방식과 수준을 포괄한다.

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 2. 시티즌십의 개념

시티즌십의 다의성으로 인해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티즌십의 개념을 우선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티즌십의 주요 연구자인 킴리카와 노만(Kymlicka & Norman 1995, 284)에 따르면, 시티즌십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legal- status)’과 ‘바람직한 시민의 덕성 및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desirable- activity)’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흔히 시티즌십을 ‘시민권’으로 번역하며 때때로 ‘시민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두 용어 모두 시티즌십 개념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시민권’이라는 말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덕성으로서의 시티즌십’은 고사하고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이라는 의미조차 완전히 담아내지 못 한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그리고 ‘시민의 소속인 국적’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데, ‘시민권’은 좁은 의미의 형식적 권리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민성’이라는 용어 역시 시티즌십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번역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시티즌십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권이나 시민성 대신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의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시민의 덕성’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

- ① 국적,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 ②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 ③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나) 바람직한 시민의 덕목과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

- ④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 ⑤ 시민의 활동(최현 2006; Klusmeyer 2001; Turner 1993)

시티즌십이 포괄하는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은 외적으로는 소속(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나타나며, 내적으로는 그러한 소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시민(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 역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곧 시민의 소속과 권리 및 의무는 시민에게 교육 기회, 복지 혜택,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규정하며, 시민의식과 그에 따른 시민참여는 역으로 시민의 지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이처럼 시티즌십의 각 영역은 서로 의존하고 동시에 규정하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의 관계,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시티즌십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스미스 1994; 터너 1997; 피어슨 1998). 이 논문은 시민의 덕성과 의식으로서의 시티즌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외국인의 귀화에 대한 태도와 이주자에 대한 우대 제도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3.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 1) 혈통-문화적 정체성과 정치-법적 정체성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ethnic nation’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civic nation’의 요소가 국민정체성 안에 함께 혼재 하며, ‘civic nation’의 요소가 정체성의 주요소가 되는 국민국가는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Brubaker 1992; Smith 2000). 혈통적-문화적 특성은 귀속적(ascriptive)이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정치적-법적 특징은 선택적(voluntaristic)이고 성취된(accomplished) 특징이므로 변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정치적-법적 요소를 국민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우 타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정체성과 다문화-다인종주의에 대한 개방성의 상관관계는 경험적으로도 프랑스의 개방성과 독일의 폐쇄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는 번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국민정체성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정치적-법적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으로 혈통적-문화적 요인(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등)과 정치적-법적 요인(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한국국적을 갖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등)을 나누어 질문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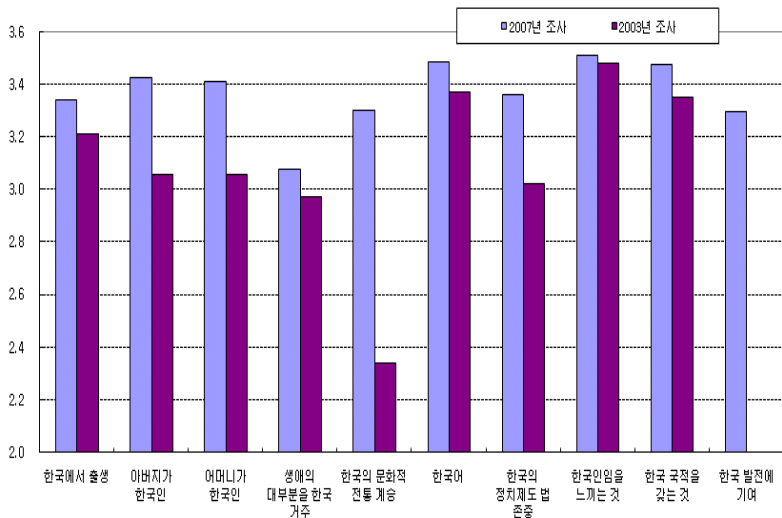
하다고 본 것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는 한국인들이 국민정체성에서 정치적-법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혈통적-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단일민족과 동질적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적 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항목으로 2003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에서 출생	3.34	0.71
2	아버지가 한국인	3.43	0.67
3	어머니가 한국인	3.41	0.68
4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 거주	3.07	0.81
5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	3.30	0.68
6	한국어 능력	3.48	0.63
7	한국의 정치제도 법 존중	3.36	0.70
8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51	0.62
9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47	0.64
10	한국 발전에 기여	3.30	0.71

주: 4점 척도로 조사 :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점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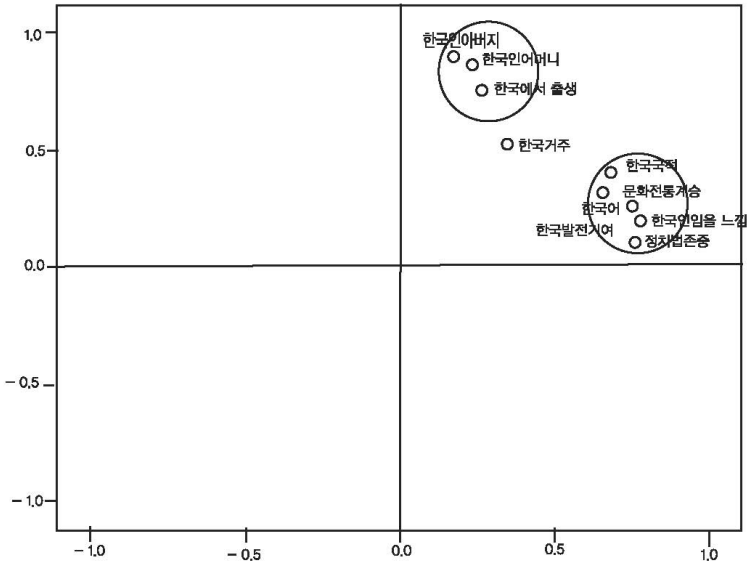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요건 항목에 대한 2003년과 2007년 조사 비교

위의 그림은 2003년<sup>3)</sup>과 2007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항목에 대한 응답에 약간의 차이<sup>4)</sup>는 있지만, 한국인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시

- 3) 2003년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이다. 2007년 조사는 비교를 위해 거의 같은 질문을 사용했지만, 2003년 조사 설문항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 두 항목이다 : ① ‘조상이 한국인인 것’(03) →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07), ②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03)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07).
- 4) 2003년과 2007년 결과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정체성의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2번의 조사만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조사 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 항목을 바꾼 것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름” 대신에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이라는 항목을 사용한 결과 중요도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 또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항목을 2007년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한국인”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항목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혈통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2003년과 2007년 조사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정체성 변화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이 시기에 짧은 기간을 뛰어넘어 정체성을 변화시킬 만한 사회적 격변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2003년보다 2007년에 국민의 요건으로 혈

하는 항목으로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혈통적 요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동일한 추세가 확인된다. 즉, 한국인들은 혈통적-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적-법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요인분석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의 혈통적-문화적/정치적-법적이라는 유형화가 경험적으로 정확한 구분은 아니라는 것이 2007년 조사결과의 요인분석을

통이나 문화적 전통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사항목의 조정이 방법적으로 옳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은 정치적-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항목들이다. 같은 항목들을 사용했는데도 2007년에 2003년에 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차이도 크지 않아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

통해서 확인된다(<그림 2> 참조). 요인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언어, 문화적 특성 등이 정치적-법적 요건과 한 그룹(5, 6, 7, 8, 9, 10)으로 묶이고 혈통적-지역적 요건이 다른 그룹(<표 1>의 1, 2, 3)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항목(4)은 잔여적 요건으로 판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혈통적-문화적 요인과 정치적-법적 요인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혈통과 출생지 등 귀속적 특징과 언어, 한국인이라는 의식, 법과 정치 제도의 존중, 사회적 기여 등 선택적 특징으로 나누는 것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혈통-지역적/정치-법적’이라는 구분이 국민정체성의 개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개념적으로도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요인으로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 문화주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폐쇄적인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당히 개방적일 수 있다(Brugger & Reglar 1994). 왜냐하면 문화적 특성은 대개 출생 지역과 계층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귀속적이지만, 개인이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택적이며 성취된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하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유대나 소속감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문화적 특성을 공동체의 목적이 되기보다 도구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의 중시는 국민정체성의 유형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혹은 정치적-법적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혈통-지역적/정치-법적’이라는 국민정체성의 유형화 틀이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특히 동아시아의) 국민정체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 역시 차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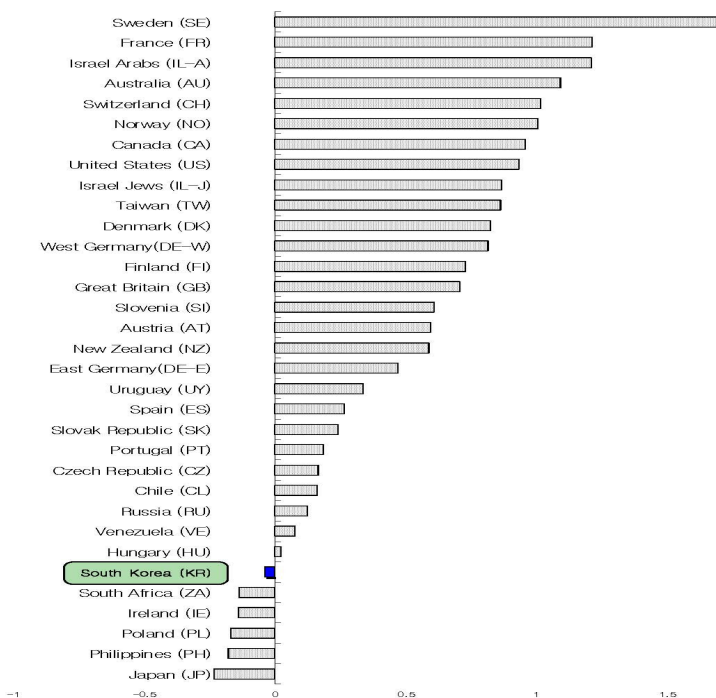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인이 혈통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는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실증연구는 오히려 한국인이 혈통주의적이라는 명제를 반박하고 있다. 장태한(2001), 설동훈·정태석(2002)과 정기선(2004)의 연구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장태한은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설동훈·정태석 역시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세대별로 비교해서 한국인의 혈통적 국민정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기선의 연구도 한국의 국민정체성을 혈통주의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인의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최근에 약화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신화에 불과했던 것인지는 차후에 연구해봐야겠지만, 혈통주의적 정체성을 당연시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인식이 갖는 특징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아래 그림(<그림 3>)은 국제적 조사모듈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1995년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혈통중심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조상이 00국인’과 정치적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00국의 정치제도 존중’의 평가점수 평균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sup>5)</sup> 일본인, 필리핀인, 폴란드인, 아일랜드인, 남아프리카인 등이 혈통주의적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웨덴인, 프랑스인, 아랍계 이스라엘인, 호주인, 스위스인, 미국인 등이 압도적으로 정치주의적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각 국가별 ‘국민 형성(nation-building)’의 역사 및 방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나 복수의 민족

5) 한국은 ISSP에 2002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1995년 조사했던 내용을 2003년에 조사했다.

이 형성한 국가들이 대체로 정치주의적인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식민지 상태에서 혈통중심으로 국민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은 혈통주의적 국민정체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치주의적 국민정체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국민의 민족구성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혈통주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출처: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1995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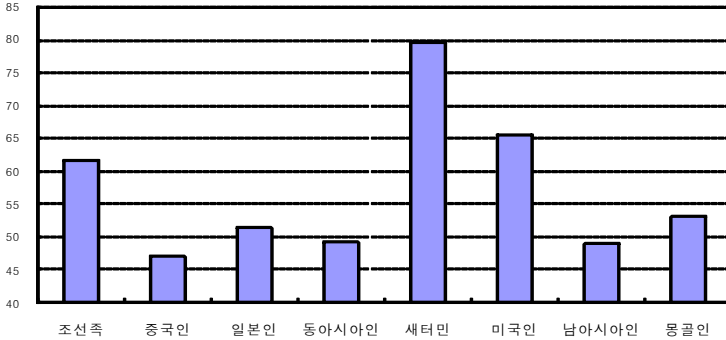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국민정체성의 정치주의/혈통주의 경향 비교

## 2)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그림 4>은 외국인들을 출신지역과 나라에 따라 구분해서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한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혈통적인 특징을 중시한다는 상식이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인 조선족에 대해서보다 인종적-문화적-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미국인의 귀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법률적으로도 우리 국민인 새터민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인종적으로 비슷한 중국인이나 몽골인, 일본인 등 다른 모든 집단보다 미국인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종에 대한 거리감이나 태도, 그리고 인종주의가 피부색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기존의 인종주의에 대한 고전적 이론(Christie 1998)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도 이태리인이나 아일랜드인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백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중국인의 귀화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의 개방성이 크기는 하지만, 예상 밖으로 귀화 찬성 응답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외국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성장세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개별적인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나 개방성에 관한 조사 연구(EUMC 2006) 결과는 실제적인 접촉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개방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것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폐쇄적 태도의 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외국인의 출신지역에 따른 귀화인정 찬성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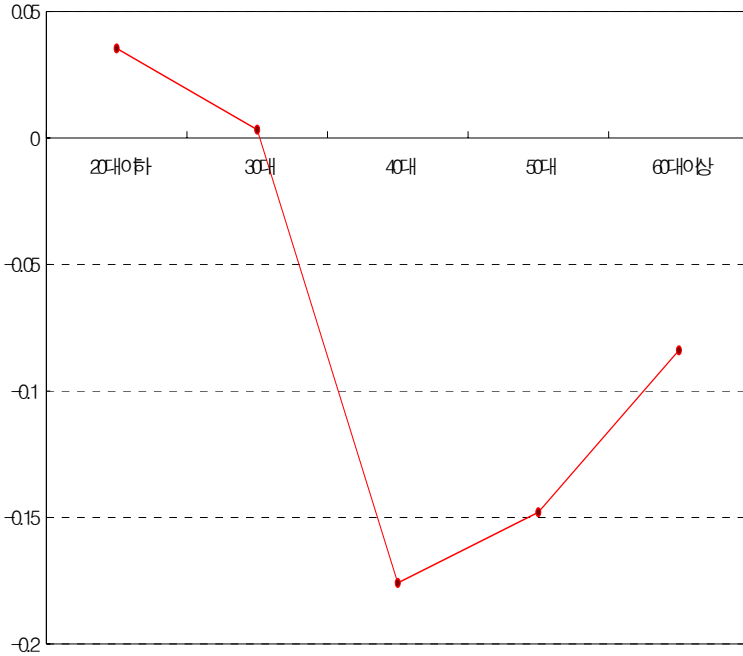
### 3) 세대간 인식차이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혈통중심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아버지가 한국인’과 정치적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한국의 정치제도 법 존중’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의 평균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다(<표 2>와 <그림 5>). 이에 따르면 30대와 40대를 경계로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혈통을 더 중시하는데 반해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연령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인의 요건 중 정치제도·법 존중과 부계혈통 평균 비교

연령	한국 정치제도 법 존중	아버지가 한국인	평균 차이
20대	3.28	3.24	0.04
30대	3.35	3.35	0.00
40대	3.31	3.49	-0.18
50대	3.44	3.59	-0.15
60대 이상	3.54	3.63	-0.08

〈그림 5〉 연령별 정치제도-법 존중과 부계혈통 평균 차이



최현(2006)의 한국 시민의식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개방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연구는 젊은 세대의 국민정체성에도 자유주의적 합리성과 개방성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합리성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만큼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종적-혈통적 국민정체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화교도 혈통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면 한국

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적 또는 혈통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합리주의는 개방주의나 문화적 다원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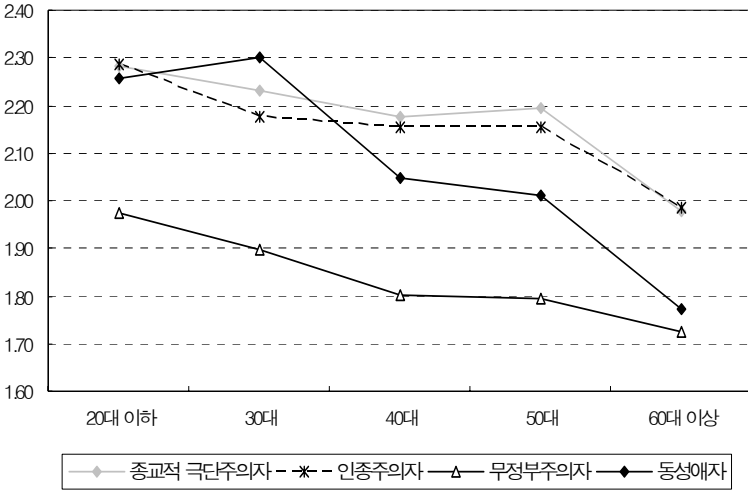
젊은 세대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태도가 약화되고 자유주의적 합리주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극단적 집단에 대한 관용성 항목과 교차시켜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집단 등 극단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공개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관용성에 있어서도 30대 이전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3>과 <그림 6> 참조). 그리고 극단주의 집단에의 개방성에 관한 4개의 응답과, 국민정체성에서 정치제도와 법의 존중을 중시하는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크지는 않지만 유의수준 0.01 또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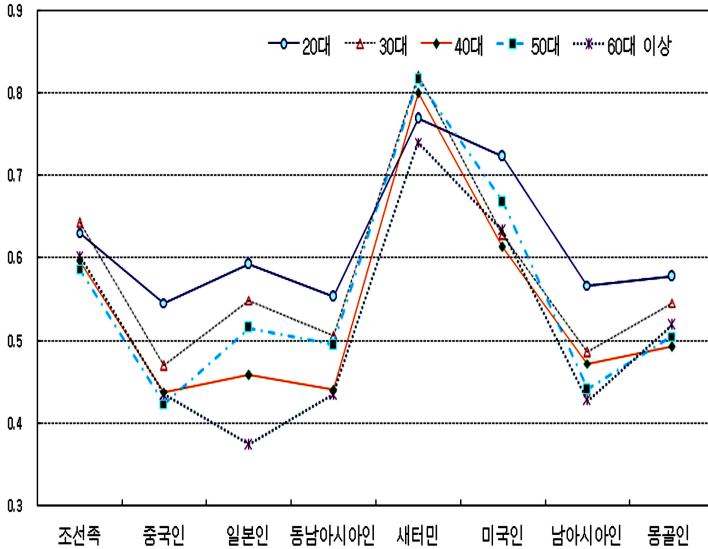
	종교적 극단주의자	인종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동성애자
20대	2.28	2.29	1.98	2.26
30대	2.23	2.17	1.90	2.30
40대	2.18	2.16	1.80	2.05
50대	2.19	2.15	1.80	2.01
60대 이상	1.98	1.98	1.73	1.77
합계	2.20	2.17	1.86	2.12

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공개집회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5점 척도로 측정. (1점 '당연히 허용하면 안된다' ~ 5점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그림 6〉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비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와 개방적 관용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사용되었던 이와 연관된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선족, 일본인, 동남아인, 미국인, 남아시아인, 몽골인 등 외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새터민과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 20대의 찬성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림 7> 참조). 같은 민족인 새터민이나 조선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이 의견이 수렴되는 반면, 그 외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젊은 세대들이 외국인의 귀화에 더 수용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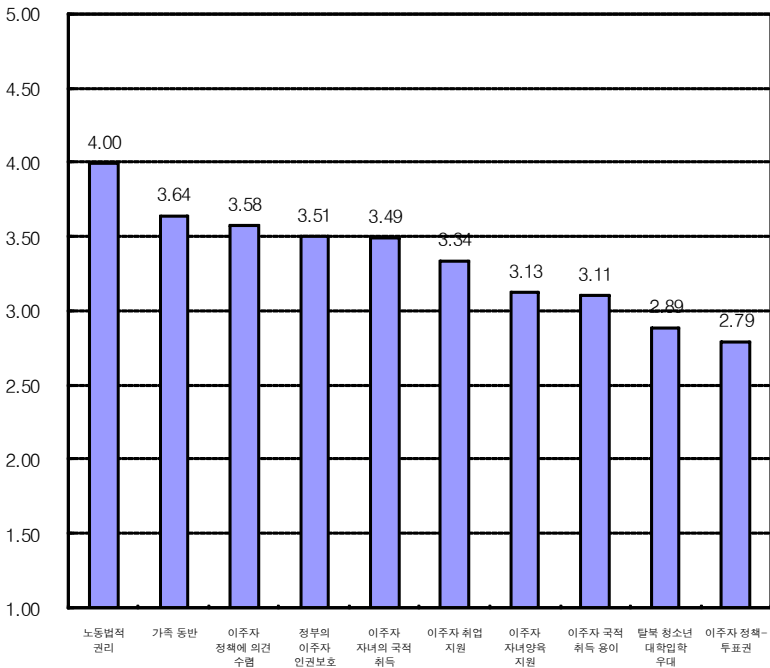
주: 최고 1점-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 0점-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대 해당 점수는 각 민족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는 비율을 의미함.

#### 4.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이 절에서는 문화적 소수자들 또는 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8>참조). 분석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78% 가량의 압도적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보다는 낮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자 정책 마련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의견 수렴, 이주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찬성의

견이 많았으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의견도 평균 3.5점(5점 척도)로 상당히 높았다. 부모의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과반수가 넘는 54.9%의 사람들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주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5.7%에 불과하였다.

〈그림 8〉 외국인의 권리 인정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평균 점수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sup>6)</sup>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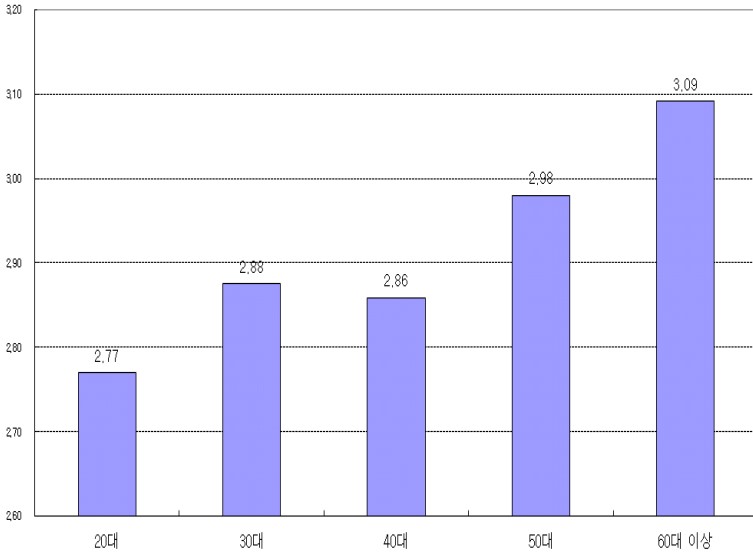
6) 적극적 조치와 다문화주의의 밀접한 연관에 대해서는 김리카(Kymlicka 1995)를 참조.

직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에게 대학입학시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는데, 평균 점수(2.89)가 중립적 입장인 3 보다 낮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적극적 조치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적극적 조치는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해 처음으로 몇 가지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도입과 적용 사례도 매우 적다.

한국에서 수행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드문 연구 가운데 하나인 윤인진과 김상학의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여론과 시민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윤인진·김상학 2003). 곧 장애인의 취업,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70~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찬성했지만, 새터민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 취업에 관한 적극적 조치에 54.1%가 찬성했을 뿐, 대학입학과 장학금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각각 60% 가량의 사람들이 반대했다. 한국 시민의식 조사의 결과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합리주의나 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최현 2006)를 해왔으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선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까지 적극적 조치가 경쟁논리나 업적주의 등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와 상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나이든 세대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20~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터민에 대한 적

극적 조치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반대 비율보다 높았다 (<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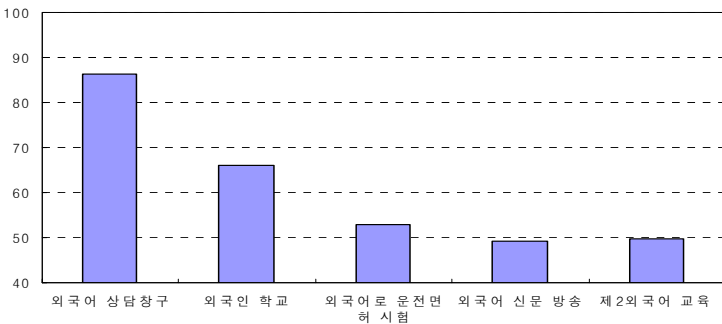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북한 청소년 대학입학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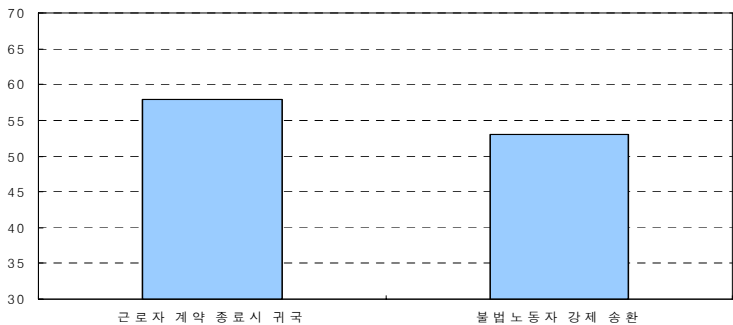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 청소년 대학입학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것을 의미함

적극적 조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다원주의적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은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관공서에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외국어 창구를 만드는 것에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성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66% 정도가 찬성했다. 가장 찬성자의 비율이 낮은 외국어 시민이나 방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했다.

〈그림 10〉 외국인 이주자 국내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찬성 비율  
(단위: %)



〈그림 11〉 계약 종료 외국인 노동자들 귀국과 불법 외국인 노동 본국 송환에 찬성하는 비율  
(단위: %)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 체류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11>을 보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

는 본국으로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시티즌십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5. 맺는말

이 논문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시티즌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인의 기준은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근거에 의해 한국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의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차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최근 정체성 변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혈통주의적 정체성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 정체성에 관한 양적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심층적인 질적 연구 등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또한 정치적-법적 정체성 역시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인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혼돈스럽고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속지

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개방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이 계약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질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인에 대해 한국인들이 더욱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조사 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유럽 공동체에서의 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한국인 실제로 접하고 시장에서 경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나 개방성에 관한 조사 연구(EUMC 2006)가 제기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다문화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우리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와 다문화주의 태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혈통중심의 국민정체성이 아닌 정치적-법적 국민정체성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차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법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서유럽의 문화와 백인들에게는 개방적이며 비서구 문화와 비백인에게는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의 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킴리카(Kymlicka 2004)가 지적하고 있듯이 보편주의적 다문화 시민의 이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sup>7)</sup> 즉 미국과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만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지구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이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와 같은 다양한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국가의 정책의 실행은 한국인들의 다문화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시티즌십은 이처럼 시민과 국가의 종합적 변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7) 킴리카(Kymlicka 2004)는 외부문화를 수용하는 모든 경향을 multiculturalism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는 패권적 서구 문화에 대해서만 개방적인 특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보편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시민을 inter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부른다. intercultural과 multicultural을 한국어 낱말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천박한 다문화주의와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구별해야 한다는 킴리카의 문제제기만은 미국인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거만한 우리 자신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법무부. 2007a. “국적별외국인입국자.” 통계청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vwcd=MT\\_ZTITLE&fromsrc=NAVER&tbl\\_id=DT\\_1B2461&rg\\_id=111](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vwcd=MT_ZTITLE&fromsrc=NAVER&tbl_id=DT_1B2461&rg_id=111) (2007년 11월 23일 검색)
- 법무부. 2007b.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현황 발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법무부.
- 설동훈·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사상』. 54: 28-52.
- 테니스 스미스. 문현아 역. 1994. 『역사사회학 이론』. 학문과 사상.
- 윤인진·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 222-248.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정기선. 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지각,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최현. 2006. “한국 시민권(Citizenship):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 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6(1). 171-205.
- 브라이언 터너. 서용석·박철현 역.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 일신사.
-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신·이택면 역. 1998. 『근대국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gger, Bill & Stephen Reglar. 1994.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Contemporary China*. edited by B. Brugger and S. Regl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ristie, Clive J. 1998. *Race and Nation: A Reader, Tauris History Read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 EUMC. 2006.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 Klusmeyer, Douglas. 2001. "Introduction." in T. A. Aleinikoff and D. B. Klusmeyer(eds.).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Political Theory.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 147-169.
- Kymlicka, Will. & Wayne, Norman.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R. Beiner(ed.). *Theorizing Citizenship*.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mith, Anthony D. 2000. *The Nation in History: Historiographical Debates About Ethnicity and Nationalism*. The Menahem Stern Jerusalem Lecture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Turner, Bryan S. 1993.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Theory of Citizenship" in B. S. Turner (ed.),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Lond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